

#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 행정통합 소통 연일 강행군

완도·해남·진도서 잇따라 도민공청회…내달 3일까지 진행  
권역별 타운홀미팅도 준비…도민의견 특별법 반영 촉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29일 완도군·해남군·진도군을 찾아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도민과의 현장 소통에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하루에만 서남권 3개 시군을 잇따라 방문한 것을 비롯해 30일까지 이번 1주일 새 무려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첨단산업·재생에너지·해양·농수산업·관광·정주여건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까지 5개 시군에서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2월 3일까지 남은 6개 시군을 모두 돌면서 22개 전체 시군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추가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남권 3개 군 공청회에서 “해남·진도·완도는 농수산업과 해양관광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해양치유·AI·데이터센터 등 전남의 미래비전을 현실화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첨단산업과 해양·농수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정주여건 개선 등 서남권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삶과 맞닿은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 도민공청회에서 도민이 제안한 견의와 의견은 특별법안 특례와 통합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관리카드로 기록·관리하며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300만㎡에서 500만㎡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통합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도민공청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도 참여하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며, 시군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사전 신청이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형배 “통합 효과, 시·도민 삶 바꾸는 것”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말하다’ 국회토론회 개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최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각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개편의 핵심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다”며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



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진우 금강대 교수, 임상우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전례 없는 기회다”며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적인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전례 없는 기회다”며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적인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이남오 군의장, 함평군수 출마 공식화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함평5일시장 고개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장은 “함평에서 태어나 함평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수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같은 제도와 예산이라도 누가 판단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군민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지금 함평에는 관행적 관리자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함평군수 출마를 전망에 놓아온 기본소득형 산업구조 구축, 태양광·관광·산단 이의 군민 소득 연결, 군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함평골프협회 회장, 초당대종동문화회장,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일 반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부 위원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김영남 민주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 출판기념회

### 내달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사진)은 다음달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자신의 저서 ‘K-문화도시 광주 서구, 일자리가 답이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서구의 구체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현실 진단에서부터 광주 서구를 세계적인 ‘K-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AI 도농복합 스마트팜 조성, 통합복지



까지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정책 구상이 담겼다.

출판기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자 사인회와 기념촬영 행사를 예정이다.

김영남 부위원장은 “이 책은 김영남 개인의 기록을 넘어 광주 서구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진실 제안서”라며 “약속하는 정치가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대형공연장·체류형 관광자원 개발…K-문화관광 허브로”

### 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공청회

#### 亞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속·관광시너지 창출 제안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열린 광주전남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사항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의 마이스(MICE) 산업과 도심 자원이, 전남의 생태·해양 관광자원과 결합된다면 체류형·복합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문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관광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에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통합을 통해 문화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지고, 문화예술인의 활동 무대는 넓어지며, 문화산업 성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케이(K)-문화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30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에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복지·노인·장애인·보건의료분야 등 직능별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김경수 “균형성장은 기업 찾아오게 만드는 것”

###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5극3특 산업전략 본격 가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 제10차 성장엔진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장엔진 전문위원회’ 출범식 제1차 회의에서 “기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성장엔진 페키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실제로 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인재·연구개발(R&D)·재정·금융 등을 결합한 성장엔진 페키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협의를 지

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권역별 전략산

업이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성장엔진 전문위원회가 현장과 기업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경우 정부 정책 설계와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율리 수도권 인구와 경제 집중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균형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청년인재 육성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광단체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통해 광

시행의 과제”라며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장엔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엔진 전문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장 소관 과제 기관인 5극3특 성장엔진 대표 전략산업 협력 기관으로서 청년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생태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정부 여

전문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시, ‘행정통합 준비조직 신설’ 조직개편안 재차 의회 제출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보류한 행정통합 준비 조직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29일 행정기구 설치(공무원 정원) 조례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실무를 전담할 ‘행정통합실무준비단’, 군공권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총괄하는 ‘통합공한미래도시본부’ 신설 등에 따른 공무원 증원 약정이 담겼다.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19일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의회가 “행정통합에 대비해 시의회 공무원 정원도 2~3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시는 의회의 증원 요구에 대해 “통합 대상인 전남도의회의 정원 증원 상황을 보거나,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에 검토하겠다”며 이견을 드러내 왔다.

시는 검토 끝에 의회의 요구대로 시의회 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해 다시 의회에 올렸다.

시의회는 이를 다시 심사해 다음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